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4호

리비아내전과 다국적군 개입사태 분석 및 전망

기획 취지

리비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결의 이후 다국적군은 리비아정부를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역사로 본 반군세력 분석,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과 R2P문제, 유럽 각국의 선택법을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합니다.

[1] 무력과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 시작됐다—북아프리카 및 리비아 역사로 본 시민혁명 분석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 <4/12>

[2]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과 R2P (박후건, 경남대 교수) <4/13>

[3] 유럽 국가들의 리비아내전 군사개입 선택법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대 연구교수) <4/19>



KNSI 특별기획 제34-1호

무력과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 시작됐다 - 북아프리카 및 리비아 역사로 본 시민혁명 분석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

- I.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종말
- II. 이슬람 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 III.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여정 전망

“수천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일구어 내고 있다. 이 흐름은 모든 아랍 및 이슬람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동의 정치 강국 이집트의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이 발표된 3월 12일 카이로아메리칸대학 정치학과 왈리드 카지하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레바논 출신으로 이집트에서 20여년 교수직을 지낸 카지하 교수는 “아랍 및 이슬람 역사의 전환점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카지하 교수의 예측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시민혁명의 물결은 이집트와 튀니지의 황량한 사막을 넘어 많은 아랍 국가로 밀려가고 있다. 당장 리비아와 예멘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버티기’ 전술을 취하고 있지만 무암마르 카다피와 알리 압둘라 살리흐 정권도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있다. 시민혁명의 높은 파도는 다른 아랍 국가들로 넘쳐 흘러들어가고 있다. 알제리, 바레인, 모로코, 팔레스타인, 요르단, 수단 등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은 아랍인의 심리구조(mentality)를 바꾸어 놓았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아랍 내 민주화의 붓물이 터진 것만은 틀림없다.” 미 해군대학원 중동학과 로버트 스프링보그 교수는 이번 민주화혁명의 성격과 파장을 이렇게 규정했다.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시민혁명이 아랍권 전체의 정치적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아랍 국가들이 앞 다퉈 민주적 조치의 이행 공약을 내거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면상으로 아랍의 현 시민혁명 현상은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1980년대 말 동유



럽 공산권 몰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 정권의 압정을 시민의 힘으로 떨쳐내고 민주화시대를 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아랍권의 최근 변화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5,000년 이상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아래로부터의 정권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아랍지역에서는 유목문화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이슬람에 근거한 ‘종교적 권위주의’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사회를 억누르고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정권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 틀이 이제 깨지고 있다.

I.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종말

사상혁명으로서 최근 아랍의 변화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인식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유목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력 혹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에 바탕을 둔다. 유목민들은 정착문명과는 달리 생사를 결정하는 우물 혹은 오아시스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을 해야 했다. 남성이 칼을 지니는 것은 당연했고, 유사시에는 우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나가 싸워야 했다. 전투를 위한 명령체계까지 갖춘 강력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필요한 사회였다. 가장 강한 가문 혹은 집안의 남자 어른에게 모든 지도력과 권력이 주어졌다. 부족원은 부족장의 명령과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지도자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것은 터부시 돼왔다. 아랍의 부족을 일컬을 때 ‘바누(Banu)+부족장 이름’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바누는 아들의 복수(複數)다. 따라서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는 부족장의 아들들이 부족의 이름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는 이처럼 아랍유목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다.

물리력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권위주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아랍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죽어야 바뀌는 정권’의 특징을 가진다. 아버지는 죽어야 그 지위를 상실한다. 소위 왕정이라 불리는 걸프국가에서는 가문의 수장이 절대 그리고 세습군주로 군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는 ‘나흐얀,’ 두바이는 ‘마크툽’ 가문, 카타르는 ‘싸니’ 가문, 쿠웨이트는 ‘사바흐’ 가문이 왕위는 물론 주요 정부 요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공화정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군부 쿠데타 세력이 대부분 죽을 때까지 집권한다. 선거는 있지만 이름뿐이다. 정권교체가 없고, 장기독재가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1969년 27세의 나이로 쿠데타에 성공해 42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다. 반정부 시민군에 대해 카다피는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의 권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무차별 진압을 펼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해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까지 투입하고 있다.



물리력을 중시한다는 것은 ‘강력한 물리력’에는 약한 속성과 연결된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7세기 초 등장한 이슬람이 수십 년 만에 스페인 남부까지 점령하는 과정에서 큰 전투는 거의 없었다. 새로 등장한 이슬람국가를 둘러싼 두 제국 혹은 다른 민족과의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였을 뿐이다. 페르시아 사산제국과 펼친 카디시아(현재의 이라크 중남부) 전투, 동로마 비잔틴제국과 싸운 야르무크(현재 요르단 북부) 전투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슬람 대군이 진군해 오면 대부분 부족은 항복 서약을 행했을 뿐이다.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유목민들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아랍의 독재정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전 자치정부 수반, 독재자 사담 후세인 등이 군복을 자주 입고 빈 권총집을 차고 다녔던 것도 물리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걸프 왕정에서도 왕세자나 왕세제가 되는 정규코스는 영국의 사관학교를 이수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거치는 것이다. 왕이 된 이후에도 정보기관과 군부는 자신의 직속 명령체계 하에 둔다. 더불어 ‘공화국수비대’ 혹은 ‘왕정수비대’ 등 친위부대를 별도로 두고 권좌를 지키는 물리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반정부 시민군은 정부군에 대해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 가부장적 권위에 순종하는 심리구조를 떨쳐버리고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아랍인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넣어준 것이 이번 시민혁명이다.

II. 이슬람 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믿는 자들이여, 알라께 복종하고 사도 무함마드와 그리고 너희 가운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슬람의 경전 쿠란 4장 59절의 내용이다. 아랍권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정부 혹은 지배세력의 정통성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종교적 배경이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을 뜻한다. 알라에 대해 복종하는 것과 더불어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지도자이자 정치지도자였던 무함마드에 대한 복종이다.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1400여 년 전 제시된 이 쿠란 구절들은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이슬람학자위원회는 3월 6일 “시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며 개혁 청원에 동참하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위원회는 또 성명에서 “개혁과 조언은 시위나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서는 안 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나라의 율법학자들이 이를 금지하고 경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하루 전 발표된 정부의 시위 불허 방침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 내무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사우디 현 형법상 어떤 형태의 시위도 불법에 해당한다"며 시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정부 시위를 촉구하는 온라인상의 움직임이 확산하자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종교지도부의 공조노력이다. 3월 3일에는 사우디 동부지역에서 시아파의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수니파 지식인들도 절대왕정을 최소한 입헌군주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슬람이 이처럼 권위주의 체제를 갖게 된 것은 창시자 무함마드의 독특한 지위에 기인한다. 이슬람은 중동의 다른 양대 종교, 즉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와 태동에 있어 상당히 다르다.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적 사명을 마치고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슬람의 사도 무함마드의 역할은 알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종교를 정착시키는데 끝나지 않았다. 그는 메카에 입성해 이슬람공동체를 만들고 이슬람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약 2년간 통치하고 죽었다. 그는 종교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지도자였다.

이슬람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무함마드는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장치를 만든다. 때문에 이슬람은 유교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유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일종의 통치철학적인 특성을 상당부분 보여주고 있다. 또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데 용이한 생활종교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보도록 규정한 것도 국민의 삶을 이슬람의 통치철학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중국에서 유교가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이 아직 중동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아랍권 시민혁명은 이슬람 종교의 권위주의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최근 아랍권 민주화사태에서 가장 긍정적인 현상 중 하나는 시위대의 구호에 이슬람적인 내용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민족적 그리고 세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등 서방이 우려하는 이란 모델의 이슬람혁명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혁명이 이슬람혁명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확대과장된 것이다. 이집트의 경우 무슬림형제단은 시위 분위기에 편승했을 뿐이다. 물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혹은 이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적지 않은 표를 얻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아파와 달리 수니파는 1,400여년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이슬람이 권력을 차지한 적이 없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종교적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권위에 도전할 세력을 용인하지 않



았다. 때문에 이슬람 전체인구의 약90%를 차지하는 수니파에서는 성직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함마드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수니파 이슬람에서는 누구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다. 더불어 기독교의 십일조에 해당하는 자카트(희사)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돈이 종교기관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상식적으로 사람과 돈이 없는 종교기관이 왕권 혹은 권력층에 도전하거나 위에 올라설 수 없다. 무함마드가 추구한 것은 백성의 도전이 존재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였다. 따라서 시아파와 달리 수니파에서는 1,400여년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이슬람이 권력을 차지한 적이 없다. 이슬람은 권력과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동원하기 쉬운 수단이었다.

아랍권 최대 정치, 문화 강국 이집트가 무너진 날, 22개 아랍국가 대다수 수도 중심가에 모여든 인파는 자국의 일인 양 환호했다. 압제에 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이번 아랍의 시민혁명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틀의 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 인식체계 혹은 심리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한 시민봉기이기에 튀니지 대통령이 축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집트 대통령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또 동시에 예멘은 물론 리비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III.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여정 전망

실제로 이번 민주화혁명은 중동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동을 구성하고 있는 3대 정치체제, 즉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왕정 세습군주제에서 모두 심각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위나 반정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현재 카타르뿐이다. 아직 모든 아랍국가가 본격적인 민주화 여정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한 공화정의 부자권력세습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중동 최대의 정치, 문화 강국 이집트가 붕괴한 배경에는 권력세습이 있다. 생활고와 부패도 근본적인 원인이었지만, 이집트의 민심은 물론 기득권층의 반발을 가져온 사안은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세습하려는 무바라크의 움직임이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둘째 사이프 알-이슬람 혹은 넷째 무으타심에게 권력을 이양할 움직임을 보였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이 반군에게 영향을 준 것도 분명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권력세습에 대한 동부지역 부족들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카다피의 혁명으로 몰려난 이드리스 왕조의 거점이었던 동부 지역은 42년 동안 카다피의 통치 아래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이 지역의 3대 부족인 알-와르팔라, 알-우바이다, 알-무



가르바 부족 출신이 반군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부이자 전사들이다. 여기에 카다피 정권에서 이탈한 무스타파 압둘 잘릴 전 법무장관이 반군의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내무장관을 지낸 압둘 파타 유니스가 반군의 최고사령관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오랜 망명생활을 했던 인사들이 속속 귀국해 반군에 가담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과거 리비아군에서 장성을 지냈던 칼리파 헤프티르다. 20여 년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해 현재 자칭 반군의 '야전 사령관'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는 점차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서방 인사들이 포진되고 있다. 총리로 임명된 마흐무드 지브릴은 피츠버그대학 박사 출신이고 재정장관직을 담당하게 된 알리 타루니는 워싱턴대학 교수다. 서방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래 생활한 인사들이 대거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재 반군 지도자들은 새로운 헌법과 선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복수정당, 독립적인 사법부 등을 갖춘 민주국가의 탄생을 원하고 있어, 향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새로운 국가를 추구하는 반군과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정부군 간의 충돌로 리비아에는 한동안 유혈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이로 대학 아랍어과 무함마드 유수프 교수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 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전망했다. 튀니지의 사례가 압정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역사적으로는 물리력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에는 아랍 민중도 집착한다는 것이다.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아랍의 민주화 시위는 무력 독재의 두려움이라는 족쇄를 부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리비아에서 새로운 방식인 무장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랍권에서는 한 동안 혁명적 과격성과 반혁명적 과격성이 맞부딪히면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한 번의 평화적 정권이상의 경험이 없는 아랍 민중에게 그 혼란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타협점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소한 물리력에 바탕을 둔 강압적인 절대주의 군부독재나 군주제는 아닐 것이다. (2011/04/12)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과 R2P

박후건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리비아내전의 배경과 경과
- II. R2P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 III. 리비아와 코트디부와르 사태에서의 R2P
- IV. R2P의 인도주의적 제국주의 경계해야

I. 리비아내전의 배경과 경과

리비아내전은 카다피의 둘째 혹은 넷째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할 움직임으로부터 촉발되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이 반군에게 영향을 준 것도 분명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권력세습에 대한 동부지역 부족들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¹⁾ 리비아내전이 발발하자 카다피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반군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2월 26일 UN안보리는 리비아제재결의문 1970호를 채택하였다. 결의문에 따르면, 시위대진압에서 나타난 민간인에 대한 폭력 및 무력사용과 민간인에 대하여 자행되는 공습이 반 인권범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언급하며, 즉각적인 폭력행위의 중단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리비아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다.²⁾

1970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카다피군은 반군과의 교전을 계속하였다. 이에 3월 17일 프랑스·영국·미국이 주도하여 15개 이사국 중, 중국·러시아 등 5개국도 기권한 가운데 1973호 UN안보리결의문이 채택되었다. 1973호에서는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서의 모든 비행을 금지하고, UN 회원국들에 카다피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take all measures to protect civilians)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³⁾ 즉 1970호와 1973호 결의문을 통해 R2P⁴⁾ (Responsibility to Protect-국제사회가 독재자와 폭압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임)를 명분으로 리비아내전 개입의 길을 연 것이다.



II. R2P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그러면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서방국가들이 군사개입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R2P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pundit)들이 글을 쓰고 있다. 그 중 미국의 칼럼리스트며 저널리스트인 조지 윌(George Will)의 글을 분석해 보면 위 질문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조지 윌은 풀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며 칼럼리스트이다. 윌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이지만 철저하게 사실(fact)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조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여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street Journal)과 같은 경제 중심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powerful)하고 영향력(influential) 있는 언론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지 윌의 리비아사태 관련 여러 글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4월 6일자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고정칼럼이다. “The Haze of Humanitarian Imperialism(인도주의적 제국주의의 몽롱함),”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글이다.(이 글은 비슷한 제목으로 4월 7일자 헤럴드 트리뷴(The Herald-Tribune), 덴버 포스트(The Denver Post)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에서도 실렸다)

윌은 칼럼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먼저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리비아 거주 시민을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을 명분으로 군사 개입에 돌입한 것을 인도주의적 제국주의로 규정한다. 또한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반정부(반 카다피) 반란군(rebel)을 시민(civilian)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영국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반란군’에 대한 호감이 갖고 있지만, 모든 ‘반란군’이 다 좋은 반란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1960년 대 스페인 내전에서 마드리드로 진격한 반란군이 후에 독재자가 되는 프랑코의 반란군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윌은 정론지에서 이야기하기 대단히 어려운 내용도 자신의 칼럼에서 담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말대로 미군이 리비아 지상전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현재 반 카다피 시위자들 사이에 그리고 반란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CIA소속 요원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윌은 코트디부아르(Ivory Coast)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대해 미국의 정치인들이 R2P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칼럼은 칼빈 쿨리지 전 대통령이 강조하였듯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mining own business)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다.



조지 월은 저명하고 신망이 높은 언론인이지만 많은 언론인들 중에 한명에 불과하다. 또한 지상(紙上)에서 칼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월이 자신의 칼럼에 쓴 것은 분명 월 자신 한 명의 의견이다. 그러나 월이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신망을 얻고 있는 언론인임을 고려할 때 그의 칼럼은 그냥 흥미롭게 읽고 지나칠 수 없는 면이 있다.

Ⅲ. 리비아와 코트디브와르 사태에서의 R2P

월이 지적했듯이 리비아사태는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일어난 소위 채스민혁명과는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시민들의 무력봉기보다는 마치 우리의 4·19와 같은 양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전개되었으나, 리비아에서는 2월 17일 뱅가지에서 ‘분노의 날’ 집회에 대한 카다피 정권의 진압이 있자마자 무력봉기 또는 반군(rebel)의 형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무력봉기 그리고 특히 반군은 단 순간에 조직될 수 없다.

더욱 특이한 점은 만약 생존을 위해 긴급하게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광주민중화운동에서 보았듯이 확실하고 강력한 지도부 없이 그리고 외부의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는 어려운데 현재까지 거의 리비아 전역에서 이러한 반군들이 조직적으로 결성되고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반군형태로 조직되어있는 반(反)카다피군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당한 시간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은 2월 17일 ‘분노의 날’ 집회가 있고 약 일주일만인 2월 26일 UN안보리에서 무기금수, 경제제재, 카다피 정권 고위인사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는 UN안보리결의안 1970호가 신속하게 채택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월은 미국 상·하원(Senate and Congress)에 코트디브와르 사태에 R2P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순성을 지적하였는데, 미국 행정부는 코트디브와르 사태에 대해 와타라(Quatarra)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트디브와르 사태는 지난 2010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그바그보(Gbabo)가 야당 후보인 와타라에게 패배하자 불복하고 모든 수단(무장을 포함한)을 통해 투쟁을 선언하면서 일어났다. 프랑스가 주도한 국제사회(EU 그리고 UN)는 와타라가 선거의 진정한 승리자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그바그보가 무장을 동원한 불복종을 계속하자 R2P를 내세워 개입하였다. 그러나 코트디브와르 사태에 대한 진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바그보는 프랑스의 지원으로 30년간 코트디부아르를 철권으로 다스린 페릭스 하우스푸엣-보익기(Felix Houphouet-Boigny)를 몰아내고 2000년에 집권하였다. 그바그보는 반외세(anti-France) 코트디부아르 민족주의(nationalism)를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를 10년간 통치하였는데 이러한 그바그보는 프랑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 야당의 후보자로 나온 와타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관료로 일한 경력이 있는 친 서방(친 프랑스)적 인물이다. UN안보리는 그바그보의 지지세력(The Young Patriots)이 그바그보의 전통적인 반대세력인 북부 주(州)의 이슬람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보도를 사실로 받아 들여 R2P를 가동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와타라도 그바그보만큼이나 잔학행위를 저질렀다. 친와타라 군대는 민간인 최대 1천명을 살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⁵⁾ 와타라세력 역시 비슷한 학살을 그바그보 지지세력에게 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제임스 인호페(Jame Inhofe, 오클라호마주)는 지난번 코트디부아르 대선에서 와타라가 승리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와타라의 손을 들어준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호페 상원의원은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서 북부 주에서 수 만 표를 얻은 그바그보가 결선투표(a run-off election)에서 어떻게 한 표도 얻을 수 없었겠냐면서 결선투표가 외부(프랑스)개입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IV. R2P의 인도주의적 제국주의 경계해야

이렇듯 코트디부아르 사태에서 국제개입의 발미가 된 R2P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가 리비아 시민을 카다피 독재정권의 폭압과 학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명분이다. 즉 R2P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현실에서 발휘되고 있는 R2P는 R2P가 담고 있는 인도주의적 사상과는 큰 간극이 있다.

R2P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제국주의(humanitarian imperialism)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R2P를 명분으로 개입하기 시작할 경우 한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제국주의적인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지 월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R2P를 적용함에 있어서 친서방정권과 반서방정권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 문제도 R2P의 오용과 남용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R2P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른바 문제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대개는 프랑스와 같은 식민지 종주국들이다)은 개입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내전에 대한 다국적군의 개입 사태도 결코 예외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011/04/13)



<각주>

- 1) 서정민(한국외국어대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의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34-1호(4월12일) 참조
- 2) UN안보리결의문 1970호 참조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1/251/14/PDF/N1125114.pdf?OpenElement>
- 3) UN안보리결의문 1973호 참조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1/268/39/PDF/N1126839.pdf?OpenElement>
- 4) R2P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보혁의 4월 10일 프레시안 기고문 참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410142718§ion=05
- 5) 코티디브와르사테는 4월 12일 연합뉴스 참조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4/12/0605000000AKR20110412165700009.HTML>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KNSI 특별기획 제34-3호

유럽 국가들의 리비아내전 군사개입 쟁점

조혜경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

- I. 리비아 군사개입: 서방의 명분과 내용
- II. 리비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
- III. 유럽 국가들의 리비아 쟁점

I. 리비아 군사개입: 서방의 명분과 내용

지난 3월 19일 유엔의 비호 아래 시작된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군사개입으로 그동안 “현상유지”를 근간으로 했던 서방의 중동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이 공식적으로 가다피 축출과 체제전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다피 정권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호관계를 쌓아왔던 서방국가들이 일순간 태도를 바꾸어 가다피 축출을 향해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무력개입에 나선 것에는 많은 의문이 뒤따른다.

우선 3월 17일에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의 목표와 어긋난다.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유엔결의안 1973호는 국민보호 책임 원칙에 의거해 가다피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중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권 민주화 시민혁명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예멘, 바레인, 시리아의 유혈진압 사태에 서방국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리비아를 제외한다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도미노처럼 번지는 제4의 민주화 물결에 대해 적극적 불개입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현재 공습에 직접 가담하고 있는 국가는 6개 나라에 불과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습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가 분담하고 있다. 군사행동 초기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군사작전 지휘권을 나토에게 이양한 이후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났으며 대다수 유럽연합과 나토회원국들은 소극적인 지원 수준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고, 유엔 결의안 채택에서 기권 표를 던진 독일



은 처음부터 군사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가다피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나토회원국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한 달이 넘는 군사작전은 교착상태에 빠져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공습작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비아 군사개입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소수 유럽국가의 돌출적 행위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과거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리비아 사태는 외세의 군사개입을 통한 독재정권 축출 시도가 갖는 딜레마와 한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II. 리비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

이번 리비아 군사개입은 미국이 아닌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난 3월 17일 유엔 결의안 채택과 즉각적인 군사행동은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 결의안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군사행동을 주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군사행동에 참여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가다피 축출을 주장하면서도 군사작전 수행에는 전면에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무대를 프랑스와 영국에게 넘겨준 상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머지 나토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응은 각양각색이다. 유럽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별로 리비아의 의미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반경이 결정된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럽 내부의 불협화음과 동상이몽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이다.

리비아에 대한 유럽의 이해관계에는 석유자원 확보와 테러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축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1969년 아랍민족주의 혁명의 기치를 내걸은 가다피가 친서방 왕정체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 대립과 화해를 반복해 온 리비아와 서방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가다피의 노골적인 반제국주의, 반이스라엘 노선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가 리비아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석유 때문이다.

가다피에게도 서방과의 원만한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석유개발에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방과의 관계악화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세계의 “강대국가”로 낙인이 찍혔던 리비아가 1990년대 들어 서



방과의 극단적 대결을 포기하고 타협을 선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가다피와 서방 사이에 적대적 대립의 시발점은 미국이 리비아의 테러지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1979년 외교단절을 선언한 것이었다. 가다피가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1986년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선언하고 1990년대 초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로 확대된 이후 리비아의 경제는 망신창이가 되었다. 리비아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새로운 석유수출 시장을 찾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미국의 해상봉쇄를 피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서방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유전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시련을 견디지 못한 가다피는 서방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가다피가 비록 서방이 제기하는 테러사태 배후 의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테러 용의자를 서방측에 넘겨주고 피해자 보상을 단행했다. 2001년 9.11사태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자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리비아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회복하며 2004년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복귀했다.

그와 함께 1986년 리비아를 떠났던 서방의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리비아 진출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가다피 측에서도 당시 리비아 석유생산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하루 3백만 배럴을 목표로 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해외 석유회사들의 리비아 유전개발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것은 유럽의 석유회사들이었다. 1986년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리비아에서 완전 철수한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토탈과 스페인의 렉솔과 같은 유럽의 일부 석유회사들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우회하여 리비아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에게 출발한 유럽의 석유회사들은 유전개발권 획득을 위해 가다피에게 엄청난 양보를 해야만 했다. 가다피가 서방의 석유회사들이 가져가는 몫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들고 나온 것이다. 뒤늦게 합류한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유럽의 석유회사들은 요구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리비아 진출에 열을 올렸다.

리비아와의 불편한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리비아 석유에 매달리는 이유는 리비아가 유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경질유(light sweet crude) 생산 세계 1위국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OPEC 산유국과 미국에서 생산되는 중질유와는 달리 리비아산 경질유는 별도의 탈황 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로 정제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고



품질 원유로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정유사들의 경우 경질유와 중질유 정제가 모두 가능하지만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들은 중질유 정제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유황 경질유를 취급한다.

그에 더해 지중해 건너편 이웃국가라는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이 있다. 리비아 석유의 최대 수출시장은 유럽이다. 유럽이 리비아 석유 수출의 85%, 미국 5%, 아시아가 나머지 10%를 차지하고 있다. 리비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대부분도 유럽 국가들이다. 리비아 석유 의존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아일랜드가 23.3%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22%, 오스트리아 21.2%, 스위스 18.7% 순이었다. 다른 유럽 주요국들의 리비아 석유 의존도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프랑스 15.7%, 그리스 14.6%, 영국 8.5%, 독일 7.7%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Ⅲ. 유럽 국가들의 리비아 쟁점

경질유를 소비하는 유럽 국가들이 리비아를 대체할 다른 수입선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리비아 내전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이 받는 타격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전혀 예상치 못한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유럽의 리비아 유전개발 사업은 또다시 일시적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이 가다피 축출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가다피의 정치적 운명과는 상관없이 유럽이 리비아의 석유를 포기할 수 없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군사개입을 통해 리비아 유전개발 이권 경쟁의 새 판 짜기가 가능해졌고 이는 유럽에게 새로운 기회임이 분명하다. 리비아 석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리비아 유전개발권 경쟁의 후발주자로서 영국은 미래를 기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래전부터 리비아 유전개발 사업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것이 많다. 게다가 리비아는 프랑스 무기 수출의 주요고객에 속한다.

리비아 석유를 둘러싼 프랑스와 영국의 속셈이 서로 다르지만 대외전략에서 두 나라를 하나로 엮어주는 끈이 존재한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며 유럽 전체 방위비 지출의 50%를 차지하는 군사강국에 속한다.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과 함께 프랑스는 군사안보 및 대외전략에서 유럽의 독자노선을 주장해왔다.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영역에서도 초국가적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프랑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원대한 계획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늘 외면을 받아왔다. 미국을 겨냥한 프랑스의 대외전략적 지향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다. 양대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45년 이후 군사외교적 저자세를 생존전략으로 채택했다. 현재 까지도 독일의 대외정책에는 세계 패권경쟁의 전략적 마인드가 부재하다. 유럽의 대외정책은 여전히 철저히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별국가의 영역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개별국가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유럽차원의 단일한 대외전략은 요원한 숙제이다.

이러한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전략에서 유럽의 독자노선을 향한 프랑스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1998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세인트 말로 이니셔티브”(St. Malo Initiative)에서 일정한 결실을 보았다. “세인트 말로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제분쟁에 유럽연합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금까지 나토의 지휘권에 전적으로 귀속되었던 개별국가의 군사자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유럽연합 공동방위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세인트 말로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던 프랑스와 영국은 작년 11월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자원의 공동이용, 영국군과 프랑스군으로 이루어진 합동파견군 창설, 핵무기 기술개발 협력, 공동 핵실험 등의 포괄적인 협력방안에 합의를 보았다. 이번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활약은 작년에 체결된 양국 간 방위협정의 첫 실험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방위 영역에서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시도는 갈 길이 멀다. 대외정책 영역에서 유럽 내부의 불협화음은 근본적으로 개별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와 영국의 리비아에 대한 적극적 군사개입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민혁명으로 촉발된 아랍권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속수무책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정치적 무능을 만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이웃국가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리비아 반군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나토의 군사지휘권을 반대하며 유럽의 내분을 부추겼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는 국내정치적 위기를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전시 대통령”의 이미지로 돌파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처음부터 군사개입에 반대한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나 명분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독일국민의 대다수가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연방의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독일 국내정치의 핵심쟁점이 되어왔다. 다국적군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즈음해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가 독일의 군사개입에 반대했고 찬성은



8%에 불과했다. 독일국민의 반전 반핵 정서를 무시하고 독일정부가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노선을 쫓아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개입을 지지하면서도 직접적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는 나머지 유럽 회원국들의 경우 석유자원을 노린 제국주의적 군사적 모험이라는 대내외적 비난을 모면하고 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자국이익에 충실한 개별국가의 동상이몽에 리비아 사태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이 애초부터 아랍권의 민주화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2011/04/19)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